[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통적으로 이런 법을 '자연법'이라 부르며 논의해 왔다. 자연법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둔다. 특히 인간의 본성에 갖는 이성, 다시 말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은 자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서구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라고 이해하여 종교적 권위를 중시하였다. 이후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서는 신학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연법을 오직 이성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경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1583~1645)는 중세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인간 이성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 그는 이성을 통해 확인되고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법 규범은 자연법이자 신의 의지라고 말하면서, 이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의 올바른 인도를 통해 다다르게 되는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보았다.

그로티우스가 활약하던 시기는 한편으로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 그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법도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자연법에 기반을 두면 가톨릭, 개신교, 비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이렇게 이루어진 법 원칙으로써 각국의 이해를 조절하여 전쟁의 참화를 막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1625년 『전쟁과 평화의 법』이란 저서를 낳았다. 이 책에서는 개전의 요건, 전쟁 중에 지켜져야 할 행위 등을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 때문에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신의 권위에서 독립한 이성의 법에는 인간의 권리가 그 핵심에 자리 잡았고, 이는 근대 사회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한 예로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에도 자연법의 영향이 나타난다. 더욱이 프랑스 대혁명기의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을 불가침의 자연법적 권리로 선포하였다. 이처럼 자연법 사상은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특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자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은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비판의 선봉에 서며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이른바 '법률실증주의'이다. 법률실증주의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되며, 또한 그것은 국가 권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로 말미암은 참혹한 세계 대전을 겪게 되자, 자연법에 대한 논의는 부흥기를 맞기도 하였다. 오늘날 자연법은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여전히 의의가 인정된다.

26.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실정법은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규범이다.
- ② 미국의 독립 선언에 법률실증주의가 영향을 주었다.
- ③ 서구의 근대적 법체계에는 평등의 이념이 담겨 있다.
- ④ 중세의 신학에서는 신의 법에 인간의 이성을 관련시키지 않았다.
- ⑤ 프랑스 대혁명에서 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사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② 국가 간에 전쟁을 할 때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 규범이 있다.
- ③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야 한다.
- ④ 각국의 실정법을 두루 통합하여 국제법으로 만들면 그것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현실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⑤ 종교의 차이로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법을 구성하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자연법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의 권위만이 자연법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② 윤리나 도덕과 관련이 없는 근원적인 법 규범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 ③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대립하지만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다고 생각했다.
- ④ 인간의 이성이 시공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⑤ 자연법의 역할은 실정법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29. <보기>는 윗글을 읽고 쓴 글이다. ㉠~㉣ 중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법과 정의의 관계로 법을 바라볼 때 자연법 사상과 법률실증주의는 서로 마주 보도록 양쪽 끝에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 자연법 사상에서는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 법률실증주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내용이 정의로운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뚜렷이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때, 법률실증주의를 따르면 실정법만이 법이 되므로, 무엇이 법인지 확정하는 일이 간편하다. 하지만 ㉣ 법률실증주의에 따르면 심각하게 부당한 내용의 법률조차도 입법의 형식만 거쳤다면 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 법률실증주의는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의 권위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와 함께 국민의 준수 의지라는 도덕적인 근거를 들어 답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늠할
- ② 가져올
- ③ 기다릴
- ④ 떠올릴
- ⑤ 헤아릴

◆ 11 MDEET 언어추론 14~16번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8세기 영국의 사상가 버크는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 대중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일반 국민이란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그는 계약에 의해 선출된 능력 있는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지도자로서 국가를 운영케 하는 방식의 대의제를 생각해 냈다. 재산이 풍부하여 교육을 충분히 받아 사리에 밝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대의제란 지도자가 성숙한 판단과 계몽된 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여기서 대의제의 본질은 국민을 '대표'하기보다 국민을 '대신'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즉 버크는 대중이 그들 자신을 위한 유·불리의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독립적 판단을 통해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버크에 따르면 국민은 지도자와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했다기보다는 '신탁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개별 국민들의 요구와 입장을 성실하게 경청해야 할 의무 대신에, 국민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대신할 의무가 있다. 그는 만약 지도자가 국민의 의견을 좇아 자신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18세기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했던 페인은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주목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타고났으므로, ㉠ 사회적인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했다. 또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기에 권리의 보장을 위해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포함하는 당시로선 다소 급진적으로 여겨지는 권리 개념까지도 수용하였다. 이런 전제 아래, 페인은 국가란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각자 주권을 갖고 지도자와 상호 계약을 체결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통치를 지도자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는 권리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최고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공정한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란 공히 어떤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것이 헌법을 만드는 데에도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원칙의 핵심은 소멸될 수 없고 양도될 수도 없는 신성한 인간 권리의 수호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국민 개개인의 절대적 권리보다는 탁월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국민의 자질을 강조하였다. 즉 아무리 국민이 민주적이며 자발적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서 선출한다고 해도,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고 일반 국민이 이에 따르는 한에서는, 권력 관계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적절한 자질이 중요하다고 러셀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일단 선출된 지도자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나, 반대로 소수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태도 모두를 지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도자를 선택한 이후에도 모든 것을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을 통해

지도자의 결정에 대한 수용과 비판의 지속적인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도자나 국민 모두 회의주의나 극단주의에 경도되는 것을 경계해야 민주 국가에서 지도자와 국민의 바람직한 관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4. 버크, 페인, 러셀의 공통된 견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다수결의 원칙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 ② 국민과 지도자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다.
- ③ 지도자는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④ 국민은 존엄성을 지닌 신뢰할 만한 존재이다.
- ⑤ 국민은 지도자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15.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버크가 말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② 버크는 국민의 자질이나 역할보다 지도자의 능력을 더 중시했다.
- ③ 페인에 따르면 국민은 권리 보장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 ④ 페인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 ⑤ 러셀에 따르면 민주적 선거는 국민과 지도자 간 권력 관계의 평등을 보장한다.

16.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시간대에 고속도로 전용 차선제를 실시하여 진입이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
- ② 전염성 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자 발생 지역 주민의 출입을 제한한다.
- ③ 성범죄 전과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한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자 발찌를 강제로 착용하게 한다.
- ④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주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들의 단지 내 관통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 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한해 개발을 제한한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화주의란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의 정치 참여에 기초하여 공동체적 삶에서 자의적 권력에 의한 지배를 배제하고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이에 적합한 형태의 공동체에 관해서는 주로 그 규모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다. 시민적 덕성이 제대로 발휘되어 파벌이 통제되기 위해서는 공화국의 크기가 작아야 하지만, 외세의 침략 위협에 맞서 충분한 안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크기가 커야 할 것이다. 미국 헌법 제정기의 **연방주의자**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1787. 10~1788. 8)의 저자들은 바로 연방 공화국의 형태가 공동체 내부의 부패와 대외적 취약성을 둘러싼 공화주의의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파벌 지도자의 영향력이 확산되지 못하게 막는 분할의 이익과, 한데 뭉쳐 외부의 적에 대항하도록 하는 결집의 이익을 함께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지만, 가까이 있어서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보다 불가피하게 소원한 거리에 놓인 사람들이 우정과 연대의 공적 정신을 유지하기란 더 어려울 수 있다. 광대한 영토 위에서 공화주의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사익의 추구를 자제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연방주의자들은 대의제와 권력분립 등 헌정주의의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이성과 법의 지배를 통하여 파벌과 전제적(專制的) 다수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했다. 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이 사그라지거나 폭주하지 않도록 헌법의 틀을 씌웠던 것이다.

그런데 헌법이라는 것에 대한 공화주의자들의 이해는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오늘날 헌법은 주로 정치 공동체의 실질적인 가치 기준과 운영 원칙을 정하는 견고한 문서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은 헌법적 논쟁들에 대해 판단해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헌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정작용이나 법률은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극히 법적인 의미로 이해된 헌법과는 달리,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헌법이란 단순히 정치 공동체 내에서 권력이 분할되는 방식을 나타내거나 그렇게 구성된 특수한 정부 형태를 지칭하는 정치적인 의미의 것이었다. 통치자의 선출과 정치적 지분의 할당을 통해 경쟁적 사회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은 로마의 혼합정체 이래 지속 가능한 공화국의 골자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8세기 후반에 비로소 등장한 법적 의미의 헌법 개념은 당시 미국의 공화주의적 헌법을 구상하는 과정에서조차 의도되었던 바가 아니며, 성문의 헌법을 채택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은 사법적 헌장이라기보다는 시민의 헌장을 갖는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공화주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헌법의 의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 의미의 헌법 개념을 과거의 공화주의 사상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헌법을 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전제에서 공화주의를 위하여 제안되는 이른바 ① **헌정주의적 수단**들이 역으로 공화주의의 핵심적 목적과 충돌하게 된다는 문제 때문이다. 예컨대, 그러한 수단의 하나로 제안되는 법

률의 헌법 기속 개념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대표들이 다수결로 도출하는 합의를 불신한다는 면에서 공동체적 삶의 향배를 시민들의 손에 맡기고자 하는 공화주의의 이상에 반하는 것이며, 그보다는 차라리 국가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사고의 장치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꿔 말해서 소수의 현자들에 의한 사법 심사의 과정으로 뒷받침되는 헌법은 더 이상 공화주의적이지 않으며, 나아가 미국의 민주정치가 발전하는 데도 방해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정치의 상황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통치자의 선출이나 할당된 지분의 행사에서처럼 투표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적인 토론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만약 사법 심사의 장이 그와 같은 토론의 과정을 촉발시키고 이끄으로써 궁극적으로 법의 지배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동선에 관한 이성적 숙의에서 찾곤 했던 공화주의자들의 관점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공화국의 광대한 영토는 대외적 방어에 불리하다.
- ② 공화주의자는 시민으로서의 삶보다 개인으로서의 삶을 중시한다.
- ③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저자들은 안전보다 연대를 추구하였다.
- ④ 연방주의자는 공화주의의 딜레마가 지닌 정치적 함의를 간과하였다.
- ⑤ 로마의 혼합정체는 공화국의 대내적 균형을 확보해 주는 장치였다.

12. **연방주의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방 공화국의 정부 형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헌법의 개념이 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선출된 대표가 파벌 지도자로 변질되는 것을 연방이라는 헌정 체제를 통해 견제할 수 있다.
- ③ 공화국에 대한 내부 위협은 소규모의 파벌이 광대한 영역 기반의 대규모 파벌로 커질 때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 ④ 규모가 커진 공화국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다양성도 커져서 정치적 분열이 초래되어 전제적 다수가 형성되기 어렵다.
- ⑤ 인간 본성에 자리하고 있는 파벌의 싸움은 근절될 수 없으므로 그것의 발호를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대응해야 한다.

13.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적인 토론의 과정을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 과정으로 대체한다.
- ② 헌법적 가치의 선언을 통해 의회의 결정 권한에 대한 제한을 공식화한다.
- ③ 성문화된 헌법은 최고법적 효력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다.
- ④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여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의 제한을 꾀한다.
- ⑤ 법의 지배는 그 누구의 지배도 아니라는 점에서 자의적 권력의 지배를 거부하는 공화주의 이념과 연결된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미국 헌법은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대통령 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치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식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 설계는 미국 역사에서 상당 기간 성공적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헌법이라는 보호 장치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지키기에 충분치 않다. 여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화되지 않은 민주주의 규범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진다. 민주주의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규범은 민주주의보다 오랜 전통을 가진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이다. 상호 관용은 경쟁자가 권력을 차지할 권리를 나와 동등하게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상대를 위협적인 적으로 인식할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기려 한다. 제도적 자제는 제도적으로 허용된 권력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이다. 합법적 권력 행사라도 자제되지 않을 경우 기존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제도적 자제의 반대 개념은 '헌법적 권력의 공격적 활용'이다. 이는 규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자를 경쟁의 장 자체에서 제거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규범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상대를 경쟁자로 받아들일 때, 제도적 자제도 기꺼이 실천한다. 제도적 자제의 실천은 관용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선순환이 이뤄진다. 반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할 때 상호 관용의 규범은 무너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은 제도가 부여한 법적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며, 이는 상호 관용의 규범을 잠식해 경쟁자가 적이라는 인식을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민주주의 규범이 붕괴하면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두 가지 상황에서 위기를 맞게 된다. 첫 번째 상황은 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면서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이 분열되었을 때이다. 이 경우 야당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헌법에서 부여한 권력을 최대한 휘두른다. 두 번째는 여당이 입법부를 장악함으로써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여당은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야당을 제거하기 위한 대통령의 탄압적 행위를 묵인하기도 한다.

미국 민주주의는 건국 이후 두 번의 큰 위기를 겪는다. ① 첫 번째 위기는 남북 전쟁으로 초래되었다. 노예제를 찬성한 남부의 백인 농장주들, 그리고 그들과 입장을 같이 한 민주당은 당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공화당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남부는 미국 연방에서 탈퇴했고 결국 내전이 일어났다. 민주주의 규범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북부의 공화당과 남부의 민주당이 인종 문제를 전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부터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북부는 연방의 유지 등 정치적 필요에 의해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흑인의 인권 보장 노력도 중단한다. 민주당은 남부에서 흑인 인권을 억누르면서 그 지역에서 일당 지배의 기반을 구축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공화당에 대한 민주당의 적대감은 완화되었고, 그 결과 상호 관용의 규범도 회복된다. 역설적이게도 남북 전쟁 이후의 민주주의 규범은 인종 차별을 묵인한 비민주적인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백인 중심으로 작동했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② 두 번째 위기는 1960년대 이후 민주주의의 확대와 함께 일어

났다. 흑인의 참정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고, 대규모 이민으로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정치 체제로 유입되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기 다른 집단의 이익과 가치를 대변하게 되었다. 이후 양당 간 경쟁은 '당파적 양극화'로 치달았다. 보수와 진보 간 정책적 차이 뿐만 아니라 인종과 종교, 삶의 방식을 기준으로 첨예하게 나뉘어 정당 간 경쟁이 적대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종 차별에 의존한 기존의 민주주의 규범은 한계를 보이면서 붕괴했다. 따라서 미국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 규범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상호 관용이 강화되면 제도적 자제는 약화되고 상호 관용이 약화 되면 제도적 자제는 강화된다.
- ② 대통령과 입법부의 권력 행사가 합법적인 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 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③ 민주주의 규범은 민주주의 이념으로부터 탄생한 것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을 통해 발전된다.
- ④ 민주주의 규범은 헌법이나 법률로 성문화될 때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보호하는 효과가 극대화된다.
- 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민주주의를 보호하고자 한 헌법의 목적을 실현 가능하게 한 것은 민주주의 규범이다.

23.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거치면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의 규범이 건국 이후 처음으로 형성되었다.
- ② ㉠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 규범은 인종 차별적 특성으로 인해 정치 체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 ③ ㉡은 민주주의의 확대를 촉발된 당파적 양극화가 기존의 민주주의 규범을 붕괴시켰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 ④ ㉡은 다양한 집단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점차 완화되었다.
- ⑤ ㉠에서는 ㉡에서와는 달리 정당별 지지 집단이 뚜렷이 구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칠레는 성공적인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였다. 좌파에서 우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당이 있었지만, 20세기 초 이후 민주주의 규범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념적 대립에 따른 ㉠ 당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 좌파와 우파 정당은 서로를 위협적인 적으로 인식했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좌파 정당의 아옌데는 사회주의 정책 추진을 위해 의회의 협조가 필요했으나 여당은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 그는 의회를 우회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했다. 이에 ㉣ 좌파 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불신임 결의안을 잇달아 통과시켜 장관들을 해임했다. 칠레 헌법은 의회가 불신임 결의를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 1970년 이전까지 그것이 사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결국 1973년 8월 칠레 의회는 아옌데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곧이어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으로써 칠레 민주주의는 붕괴했다.

- ① ㉠은 좌·우 이념을 중심으로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심화된 당파적 양극화와 성격이 다르군.
- ② ㉡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칠레에서는 상호 관용의 규범이 붕괴되는 과정이 일어났겠군.
- ③ ㉢로 볼 때, 아옌데 대통령은 권력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함으로써 제도적 자제 규범을 실천하고자 했겠군.
- ④ ㉣로 볼 때, 민주주의 규범이 붕괴된 상황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소수당인 경우 야당이 헌법적 권력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군.
- ⑤ ㉤로 볼 때, 1970년 이전의 칠레 정치인들은 민주주의 규범을 존중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했겠군.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국가 권력에서 정통성이 없는 권위주의 정치 세력을 배제하고 선거 경쟁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여 민주적 절차를 마련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을 증시하는 주창자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경쟁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정당 및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을 획득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주의를 정치적 경쟁 및 참여가 보장되는 기본적인 절차로 해석하는 것도 이러한 설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절차적 제도로는 투표권, 공무 담임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실질적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기적이고 공정한 선거 경쟁을 통해 대표와 정부가 구성되고 국민을 대변하는 절차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 균열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및 자원 배분상의 불합리로 권력 남용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여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참여와 선택에서 연유하는 정치적 대표성이 보다 확고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대표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 기구가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실현된 성과와 실적이 국민의 요구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응답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완벽한 대리인으로 행위하도록 통제해야 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 대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퇴출되는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다양한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사회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자기 지속적인 체제로 확립되어 가는 과정,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일컬어진다. 현대 사회는 시민 사회, 정치 사회, 국가 그리고 경제 사회 등 부분 체제들의 복합체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각 부분 체제의 제도화 과정이고, 각 부분 체제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우선, 이익 표출 및 집약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 사회의 결사체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조직되어 협력하는 네트워크 및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익 갈등을 조정했을 때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가능해진다. 사회 구성원 개인과 집단의 이해가 개별적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결사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시민 사회 내의 요구 사항이 취합되어 갈등 조정이 용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정당, 의회 등으로 구성되는 정치 사회가 사회적·경제적 균열로 인한 갈등을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범, 규칙 및 절차를 갖고 있을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수 있다. 정치 사회의 공식 및 비공식 행위자들이 경제사회적 균열구조에 조응하여 편제되고, 이들의 이익을 정치 영역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할 때 민주주의는 보다 성숙되는 것이다.

아울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을 통해 갈등 조정을 시도하는 국가 능력, 그리고 경제적 지배 세력의 압력이나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의 자율성 역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중요한 관건이다. 국가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경제적 이해를 관철하는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국가

운영을 통해 구성원의 이해를 통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갈등 확산을 방지하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시장을 매개하는 경제 사회가 자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 경제의 비윤리성을 치유하는 복지 제도를 통해 시장 실패자들이 겪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경제 사회 내의 합의를 중심으로 제도화할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된다.

26. 위 글의 ‘대표성’, ‘응답성’,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 ② 선거를 통한 정치 권력의 탄생은 정치적 응답성을 보장한다.
- ③ 정치적 대표성은 정치적 응답성보다 책임성 보장에 기여한다.
- ④ 정치적 응답성은 정치 기구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의미한다.
- ⑤ 정치적 책임성은 대의제에서 정치 대표자에 대한 국민의 통제 행위와 관련된다.

27.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도입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민 사회의 신뢰 구축과 조정 기제를 강화한다.
- ② 경제사회적 균열 구조를 반영하는 정치 세력화를 억제한다.
- ③ 시민 사회의 활성화로 분산된 이익의 집약 통로를 확보한다.
- ④ 경제와 사회 지도층의 이익 독점을 통제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 ⑤ 시장 경제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사회적 합의 장치를 확충한다.

28. ㉠에 대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복수 노조 허용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 ② 피선거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당선자 대부분은 세력가였다.
- ③ 보통·평등 선거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 투표 성향은 강화되었다.
- ④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 ⑤ 법정 선거 연령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변화하지 않았다.